관광공사, 화원관광단지 J프로젝트 포함 추진

"근접·시설 중복…이대론 실패"

세제 감면 등 기업도시특별법 지원 필요

전남도 "투자 기업만 있다면 반대 안해"

한국관광공사가 해남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엔 '이대로 가면 화원관광단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숨어 있다.

관광공사는 10일 발표한 '화원관광단지 기업도시(J프로젝트) 추진방안'이라는 자료에서 "J프로젝트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추진될 경우, 관광진흥법을 기반으로 하는 화원관광단지는 인·허가 지원과 세제 감면 등 법률적 지원제도의 열세로 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기존 관광단지 개발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보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J프로젝트 지원제도가 우월한 만큼, 화원관광단지도 기업도시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J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국세)가 2~3년간 50~100%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종토세가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된다. 또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와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절반 가량 부담해야 한다. 수천 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셈이다.

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직선거리로 7㎞밖에 안 되는 곳에 3천만 평 규모의 거대 관광단지가 새로 개발됨으로써 150만 평에 불과한 화원관광단지의 기능 및 역할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외면받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화원관광단지에 들어설 골프장이나 위락단지, 마리나 등 대부분의 시설이 J프로젝트와 중복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 실패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0홀 이상 규모의 세계적인 골프장이 들어서고, 초특급 호텔과 카지노, F1경기장 등이 들어서는 3천만 평 규모의 '공룡 관광단지' 바로 곁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화원관광단지를 따로 개발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광공사 측은 이와 관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와 화봉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화원관광단지도 결국은 전남도의 땅이며, 개발의 이익은 전남도민이 갖게 된다"며 "화원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J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공사 측은 또 "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에 포함하더라도 개발사업 자체는 현재처럼 관광공사 측이 담당할 것"이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화원관광단지 개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화원관광단지와 J프로젝트 연계개발의 필요성은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죽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거대 관광레저도시가 들어서면 걸음마 단계인 화원관광단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두 사업의 주요 시설을 조정하거나 또는 J프로젝트 후보지에 화원관광단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투자할 기업만 있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J프로젝트 예정지인 3천만 평도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용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은 "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에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J프로젝트가 동북아 관광 허브로 발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해남화원관광단지는 지난 91년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업예정지인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와 화봉리 일원 151만여 평에 대한 보상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공정이 60%가량 진행됐다.

관광호텔과 콘도, 쇼핑센터, 마리나, 골프장, 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국비와 지방비 1천58억원을 포함, 관광공사 사업비 2천445억원, 민간투자유치 8천306억원 등 모두 1조1천8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대북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野 "지방선거 반전 노린 정략 발언"

■ 盧대통령 '대북 양보' 발언 파장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와 'DJ방북 기대'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지만 한나라당 등 야3당은 일제히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특별히 북한에 중대한 제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10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잘 성사되기를 바라고, 남북 평화와 교류의 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방선거를 대북문제와 연계시켜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남북 문제를 순전히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적 발언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오는 6월 초 DJ의 북한 방문은 순전히 개인자격이라고 못 박은 뒤,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DJ 방북이 마치 대통령 특사이고 지방선거 패배하면 방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DJ 방북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보이면서도, 노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 어디서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6자회담의 답보상태를 타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환율하락 한계 직면 정부 대책 세워달라

경제 5단체 건의

경제 5단체가 최근의 급격한 원·달러 환율하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안정 대책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의 상근 부회장들은 1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환율안정을 위한 경제계의 대정부 건의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환율은 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현재의 환율하락 속도는 우리 수출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수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정부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적으로는 해외간접투자 활성화, 공기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화차입시기 조정, 유전개발펀드 조성 및 한국투자공사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외환의 초과공급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화스와프 대출제도를 원부자재 수입자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0일 오전 무역협회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가진 후 환율안정을 위한 경제계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웅 전무. /연합뉴스

아울러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수수료 및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환율개입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지금은 환율하락 속도가 너무 급해 이 같은 건의문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김씨 돈 수억원 정치권 유입

삼흥그룹 김현재회장 수사 검찰 계좌추적 전면 확대

기획부동산업계 '대부' 김현재(구속)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김씨의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된 정황을 잡고 계좌추적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2004년 초 김씨를 내사할 당시 확보했던 장부와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 회사 등의 압수수색에서 정치인 10여명의 명단이 적힌 달력 등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한 245억원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 30억원 가량이 2002년 대통령선거 전후 시기부터 매입된 점을 중시, 이들 CD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주임검사인 김학석 부부장 외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계좌추적 전담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척될수록 이미 확인된 김씨의 횡령금 245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비자금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재 사건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수사성과가 있을 것이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기획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삼흥그룹의 회장인 김씨는 영암이 고향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민주당 경기도지부 국정자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작년에는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권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10호

율촌 제Ⅰ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입주)자 모집공고

율촌 제Ⅰ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 공고기간 : 2006. 5. 11 ~ 2006. 5. 20(10일간)
3. 분양대상 용지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혜면 일원
나.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다. 대상면적 및 금액 : 2,014,473㎡(609,378평), 238,586백만원
4. 토지용도별 분양면적 및 분양예정가격

구분	블럭	업종	면적		분양가격 1㎡(평)	분양가격 총가격(백만원)	비고
합계			2,014,473㎡ (609,378평)		118,436원 (391,524)	238,586	
공장용지	소계		2,011,167㎡ (608,378평)		118,436원 (391,524)	238,194	
	BL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일반용지	614,202㎡ (185,798평)	118,436원 (391,524)	72,744	분할분양가능 ※5만평이상 분양받은 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지방개량 제외시공	614,202㎡ (185,798평)	66,353원 (219,550)	40,754	
	BL 4~4-6	조립금속,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622,855㎡(188,413평)		118,436원 (391,524원)	73,768	분할분양가능
	BL6-1,6-2	제1차금속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3,587㎡(73,685평)		118,436원 (391,524원)	28,849	〃
	BL8	제1차금속산업	137,958㎡(41,732평)		118,436원 (391,524원)	16,339	〃
	BL8-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제조업	133,020㎡(40,238평)		118,436원 (391,524원)	15,754	〃
	BL 11	제1차금속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9,069㎡ (5,768평)		118,436원 (391,524원)	2,259	〃
	BL 12	제1차금속산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제조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40,476㎡(72,744평)		118,436원 (391,524원)	28,481	〃
지원시설용지	BL 11-2	산업지원시설	3,306㎡(1,000평)		118,436원 (391,524원)	392	

◉ BL2, BL4~4-6 신규분양 공고, 6-1~BL12, BL11-2 재분양 공고임
※ 부지조성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양공고

5. 분양신청 자격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토지의 용도별 분양대상 업종과 분양방법에 의한 일반실수요자
나. 신청방법 : 분양 받고자 하는 블럭을 지정하여 신청
다. 신청서류 : 구비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 함
라. 접수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
마. 접수(등록)기간
○ 정기 : 2006. 5. 15 ~ 5. 31(17일간)
○ 수시 : 상기 공고기간(정기접수)중에 분양신청이 없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분양
바. 입주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 2006. 6. 15까지
사. 입주계약 : 입주대상자 결과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

6. 분양방법
가. 공개모집(투자유치협의회 심의후 입주여부, 대상부지 등 결정)
나. 공해 적고, 고용과 연관산업 효과 크며 면적이 많은 기업에 우선권 부여
다. 공장배치는 업종간 계열화를 위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의 성격 및 신청면적을 감안하여 배치합니다.

7. 업체당 분양한도
○최소분양 면적은 대구획부지(BL2) 10,000평이상, 기타부지 1,000평이상으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의 면적으로 합니다.

8. 입주분양 신청·계약시 제출서류

구분	입주분양신청	분양계약	비고
제출서류 목록	○공장설립 등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관할세무서장 발행 재무제표증명원 (최근 2기분) ○업체소개 서류 또는 홍보책자	○입주분양계약서(소정양식)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9. 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완불금(준공정산시)
분양금액의 10%	80%	- 30억 미만 : 1년 이내(수시) 분할 납부 - 30~50억 : 1년6월(6월 단위, 3회) 분할 납부 - 50~100억 : 2년(6월 단위, 4회) 분할 납부 - 100~300억 : 3년(6월 단위, 6회) 분할 납부 - 300억 이상 : 5년(6월 단위, 10회) 분할 납부	분양금액의10%

10. 용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
가. 용지사용시기 : 용지사용은 현재 일부가능하며 용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의 30%이상 납부시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 :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가능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가격은 추정 예정가격이므로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확정측량, 공유수면매립법 절차(준공인가) 이행후 총투자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며, 사업비를 정산하여 토지대금이 입주분양 계약체결시 금액보다 증·감 있을 경우 완불금 납부시 정산 합니다.
나.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급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라.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 760 - 5410, 5420~5422, 팩스 760 - 5710

2006년 5월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